

# 인터넷언론의 영향과 기업 홍보



▲ 개최인사를 전하는 장일형 전경련 경제홍보협의회 회장(한화 부사장)

지난 6월 9일 교보빌딩 컨벤션홀에서는 전경련경제홍보협의회와 한국문화콘텐츠학회 공동주최로 '인터넷언론의 영향과 기업 홍보' 세미나가 있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각 기업 홍보실 임직원 및 학계인사 200여 명이 참석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언론에 대한 큰 관심을 반영했다.

낮은 진입장벽 인터넷언론 과포화 초래

임정섭 서강대 교수의 말에 의하면 국내 인터넷신문은 약 650여개에 이른다. 인터넷신문의 폭발적 증가세와 무분별한 난립에 대해 박창신 티씨엔미디어 대표는 지나치게 낮은 진입장벽이 원인이라고 말했다. 현행 신문법 시행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등록

기준은 취재기자 2명, 편집기자 1명으로, 이를 갖춘다면 누구나 인터넷신문사 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속적인 발행 행위 역시 1주일에 한 꼭지 이상의 자체 기사를 내보내는 것으로 발행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 실질적으로 전면허용이나 다름없는 상태라고 한다. 이렇듯 저극히 형식적인 진입 가이드라인이 인터넷언론의 과포화를 초래했고, 이는 다시 뉴스콘텐츠의 질적 저하와 저널리즘과 관련한 여러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인터넷언론에 의한 기업 피해 심각한 수준

이 날 발표를 맡은 김경재 한양사이버대 광고홍보영상학과 교수는 인터넷언론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가장 큰 피해자는 언론행위에 민감한 기업일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인터넷언론의 확대로 인해 저널리즘의 개념정의 문제부터, 뉴스의 객관성 신뢰성 저하, 법적 윤리적 언론책임성 문제, 익명성과 개방성의 특징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명예훼손 등 매우 다양한 형태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피해 상담현황을 보면 언론사업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 상황도 동반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2008년 이후 기업의 언론피해 상담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에는 인터넷언론 뉴스서비스의 증가가 원인이 수 있다고 분석했다. <표1 참조> 익명성을 기반으로 왜곡보도를 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소스를 정보원으로 삼는 일부 인터넷언론의 기사생산 시스템이 이 같은 피해를 양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김 교수는 오프라인 매체는 기사로 인해 특정인이나 기업이 피

해를 입을 경우 정보도, 반론보도 등이 가능하지만 인터넷언론은 확산속도와 범위가 광범위해 피해자의 권익구제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런 특성을 악용해 일부 인터넷언론은 기사거래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기도 해 기업의 피해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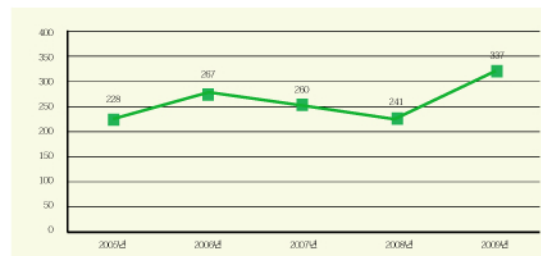
인터넷포털사 책임론 대두

한편 박창신 티씨엔미디어 대표는 지난 2월 1일 발표된 개정신문법에는 인터넷포털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분류, 법률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며, 신문법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인터넷포털도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포털은 취재, 편집의 언론행위를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않더라도 언론사 제공 기사를 자체 사이트에 배열함으로써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상 언론행위 또는 유사언론행위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의적 뉴스편집으로 인한 저널리즘 훼손이나 명예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 정도의 규제와 함께 인터넷포털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또 인터넷언론은 진입이 쉬운 만큼 퇴출관련 규제 역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인터넷언론의 등록취소 주체는 시도지사인데, 4년마다 선거를 치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



<표1> 기업의 연도별 언론피해 상담 추이



장이 언론에 대해 과태료나 등록취소를 내릴 수 있을지, 그런 판단이 객관적이고 형평성에 맞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 대표는 인터넷언론의 진입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고 그 등록업무들 중앙정부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경영활동과는 무관한 사생활 캐기, 루머를 빙자한 추측성 기사, 블랙컨슈머의 기사제보를 확인조차 없이 부풀려서 보도, 그러한 기사를 빌미로 광고나 협찬을 요구, 기사거래 불법시약성기사 시리즈로 보도하기 등 그동안 일부 인터넷언론으로 인한 기업 피해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수지 기자 susie@kca.or.kr